



진실의 문을 함께 열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세월호 참사, 꼭 밝혀야 할 9가지

기울어진 세월호, 그리고 침몰



침몰원인이 된 “급격한 변침”

정말 조타수 과실과 오작동 때문인가?
왜, 그곳에서, 무엇 때문에 급격한 변침이 있었나?

배가 다 기울기전에 도착한 해경 123정과 구조용 헬기들

구조자 0명.
왜 배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해경은 선장과 선원만 먼저 구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매 시간마다 실제 구조작업에 투입된 사람은 대체 몇 명이었나?
과연 침몰 후 수중구조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은 몇 명이고, 사용한 장비는 무엇인지, 왜 해경은 해군과 민간 잠수사들을 통제하고 제지하는데만 골몰했는가?

어그러진 퍼즐조각



감춰진 퍼즐조각

해경의 구조상황 촬영 영상, 해경 내부의 교신내용, 해경과 해군의 교신내용, 세월호를 포함한 선박들과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교신내용을 공개하라

사라진 CCTV

피의자 이준석 선장은 4월 17일 밤 10시부터 다음날인 18일 낮 12시 까지 목포해양경찰서 박아무개 경사의 아파트에서 머물렀다. 당시의 아파트 현장 CCTV는 2시간가량 삭제되었다. 해경은 왜 선장을 해경 경찰관의 아파트로 데려갔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능한 컨트롤타워, 정부

컨트롤타워들

청와대와 국정원이 사고를 접한 최초 시각과 경로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느슨해진 선박안전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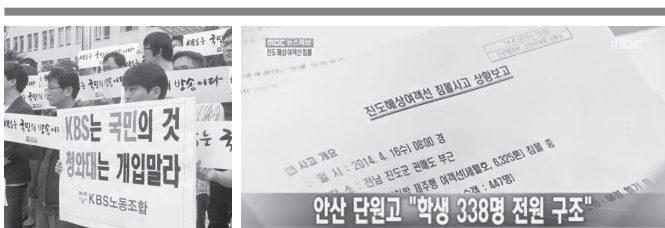
정부가 선박안전 규제를 완화하는데 유착과 특혜는 없었나?

국가정보원은 4월 16일 오전 9시 44분에 방송뉴스를 보고 세월호 사고를 인지했다고 주장

5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국정원이 전화로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이다, 세월호 매뉴얼에도 그게 돼 있다고 한다.”

해경, 오전 9시30분에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에 팩스 전송
안전행정부, 9시31분에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언론 참사



‘전원구조’ 오보

‘전원구조’ 라는 잘못된 정보를 준 이는 누구이며 보도경위는 무엇인가?

실종자 가족들의 대통령을 향한 아우성이 사라진 9시뉴스

청와대는 방송개입과 KBS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세월호 사고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원회”)는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청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 초동대응 등 전 과정을 그 조사 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 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오니, 서명을 통해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